

-특허 심사기간 줄인다-

특허심사기간이 현재 23개월에서 2005년 15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먼저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자체 가용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한 후 부족한 심사역량은 올해 심사관 89명을 증원하여 보강한다고 한다. 2003년과 2004년에도 각 80명을 늘려 모두 250명의 심사관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심사기간은 23개월로, 미국 14개월, 독일 10개월 등에 비하여 길며, 더욱이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05년에 32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2005년까지 심사기간을 미국 수준인 15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지금까지 특허심사의 지연현상은 기업, 연구소, 발명가의 민원사항으로 빈번히 제기되었으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2000년 이후 특허청 심사부서에 제기된 민원 중 13%가 심사 지연관련 사항으로 금년 3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7%가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심사기간 단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4월 대한변리사회는 심사기간 단축을 특허청에 요청한 바 있다.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져 특허를 빨리 받지 못하면 첫째, 개발기술의 사업화가 늦어진다. 특허를 받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한 후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복사품이 쏟아져 나와 사업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심사기간이 길어져 사업화가 늦어지면 산업발진이 저해되고 기술개발의욕이 떨어져 기술향상도 어려워진다. 이 현상은 기술수명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며 특허를 기다리다 상품수명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셋째,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져 특허를 늦게 주면 외국에 가는 기술료를 줄일 수 있어 득이 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로열티 절감보다는 우리 나라 전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커진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심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국을 발명정책국으로 개편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기상, 조선, 항공, 교통, 임업, 환경, 의료기술, 수의, 수산, 축산, 전송, 전자통신 분야 등 12개 기술분야에서 전문심사관 14명, 디자인 전문심사관 2명, 산업재산권 법제를 전담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심사관 2명 그리고 어학능력을 갖춘 국제협상전문가 1명 등을 연말까지 새로이 충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심사관이 획기적으로 증원되어 만성적인 심사적체 현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의 조직이 개편되어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기능과 신기술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한편, 특허청 심사관이 늘어나도 국민부담은 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은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직원의 월급 등 모든 운영비를 세금이 아닌 특허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심사관 1인당 수수료 수입은 9천만원 수준인데 비하여 쓰는 비용은 월급을 포함하여 4천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특허청 보도자료 중에서〉